



2022. 3. 29.(수)

보도시점 비상경제민생회의 배포 2022. 3. 29.(수)

종료시

관광·지역상권 활성화로 내수·민생 살린다

- 정부·지자체·기업이 합심하여 내수 붐업 패키지 추진
 - 100만명에게 3만원씩 숙박비 지원
- 비자개선 등으로 1,00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시동
-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매출 살린다
 - 먹거리 할인하고 서민주거 부담 완화한다

관광,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높이고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50여개 메가이벤트 개최, 할인행사, 정부지원, 지역축제 테마별 개최 등을 추진하고, 내외국인 관광촉진 방안, 각종 소상공인·서민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정부는 29일 진행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여 내수 활력과 경상수지 개선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서민 생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민관합동 내수붐업 패키지로 국내 관광을 본격 활성화한다.

- ‘내나라 여행 박람회(10만명 참석 예상)’, ‘드림콘서트(4.5만명 참석 예상)’ 등 50여개 메가 이벤트를 연달아 개최하여 코로나 이후 3년만에 재개하는 국내관광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백화점·대형마트·패션·가전 등 다양한 업계에서 전방위적 대규모 민간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 정부도 최대 600억원의 효율적 재정지원을 통해 내수부업을 뒷받침한다. 일반국민 134만명에게 1인당 숙박비 3만원, 놀이시설 1만원 등 필수 여행비 할인을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명에게 휴가비 10만원씩을 지원한다.
-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지역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지자체·기업이 협업하여 전폭 지원한다. 지자체별 할인쿠폰 제공, 공공시설 개방, 연고기업 후원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둘째,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확충 및 여행편의 제고방안 등도 추진한다.

-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p 상향하고 기업의 문화 업추비 인정항목에 유원시설, 수목원 입장권 등을 추가하는 등 국내 관광 활성화 유인을 확대한다.
- 대체공휴일을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까지 확대하고, 공무원 연가 사용, 학교 재량휴업 촉진 등 공공과 민간의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셋째, 금년 방한관광객 1,000만명 회복을 목표로 비자·항공편 등 방한여건 개선과 K-콘텐츠 개발도 이루어진다.

- 22개국 대상으로 K-ETA를 한시 면제하고, 중국·동남아·일본 등 국제항공 노선을 적극 증편하여 코로나 이전의 80~90% 수준까지 회복할 계획이다.
- 아울러, 크루즈 입항 재개에 맞춰 출입국 등 행정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이 국내 기차·고속버스를 예매할 때, 해외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편의 제고방안도 추진한다.
- 한편, K-pop·먹거리·의료·쇼핑·뷰티 등 즐길거리를 업그레이드하여 방한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해 나간다.

넷째, 내수 활성화의 온기가 지역·소상공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상생 지원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되었다.

- 동행축제를 당초 2차례에서 3차례로 확대 개최하고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위챗페이·유니온 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한 관광 접근성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소상공인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조기 시행, LH 공공임대 상가 임대료 인하 연장 등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기반 확충, 경영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및 주거부담 완화를 통해 내수활력을 제고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지원, 세제혜택 등으로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금융·통신시장 경쟁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대출규제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등 서민 주거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훈 (044-215-2710)
		담당자	서기관	손정혁 (044-215-2711)
		담당자	사무관	김영진 (044-215-2712)
		담당자	사무관	박철희 (044-215-2715)
		담당자	사무관	정현엽 (044-215-2718)